

##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형사정책개론 기출해설

- 임 현

1.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신고에 따른 불편·불이익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유재량도 암수범죄의 원인이 된다.
- ② 암수조사의 방법 중 ‘자기 보고식 조사’는 중범죄보다는 경미한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는데에 유용하다.
- ③ 암수조사의 방법 중 ‘피해자 조사’는 암수범죄에 대한 직접적 관찰방법에 해당한다.
- ④ 암수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비교적 많이 존재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암수조사의 방법 중 ‘피해자 조사’는 암수범죄에 대한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하는 간접적 관찰방법에 해당한다.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는 직접적 관찰방법과 간접적 관찰방법이 있으며, 직접적 관찰방법에는 자연적 관찰, 실험적 관찰이 있고, 간접적 관찰방법에는 자기보고조사, 피해자조사 및 정보제공자 조사가 있다.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다.
-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되지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된다.
- ③ 소년 가석방자의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된다.
- ④ 소년원 임시퇴원자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가석방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소년 가석방자의 가석방기간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다(소년법 제66조). 따라서 소년 가석방자의 경우는 이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호).

- ① 동법 제30조 제1호
- ② 동법 제30조 제2호
- ④ 소동법 제30조 제4호

\* 보호관찰의 기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1년
-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

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3. 가석방자 : 「형법」 제73조의2(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4. 임시퇴원자 :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3.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학 이론 중 낙인이론의 정책적 함의와 관련이 있다.
- ② 소년법에 대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③ 검찰 단계의 대표적 다이버전으로서 훈방과 통고처분이 있다.
- ④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줄여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범죄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검찰 단계의 대표적인 다이버전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다. 훈방과 통고처분은 경찰단계의 처분으로 검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4.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탈행위의 원인은 유아기의 발달단계와 관련이 있다.
- ② 인간의 무의식은 에고(ego)와 슈퍼에고(superego)로 구분된다.
- ③ 이드(id)는 생물학적 충동, 심리적 욕구, 본능적 욕망 등을 요소로 하는 것이다.
- ④ 슈퍼에고는 도덕적 원칙을 따르고 이드의 충동을 억제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는 무의식적 본능 또는 충동의 세계인 이드(id)와 무의식적 통제 또는 양심의 세계인 슈퍼에고(superego)이다. 에고(ego)는 이와 달리 현실인식의 세계이다.

① 프로이트에 의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갈등은 성장단계별로 서로 다른 형태로 출현한다. 그가 특히 중요시한 것은 성적 욕망 즉 리비도이며, 그에 대한 유아기의 경험이다. 그는 인간 정신구조의 성장과정을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유아성기기), 잠복기, 성기기의 5단계로 나누고, 이 때 유아기의 발달단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일탈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5.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지역사회를 재조직함으로써 사회통제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②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도시 중심부로부터 멀어질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

- ③ 쇼우(Shaw)와 맥케이(McKay)는 사회해체가 높은 범죄율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④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소위 변이지역(zone in transition)의 범죄율이 거주민들의 국적이나 인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에서 동심원을 ‘구역’이라고 표현하고 각각의 구역은 범인성의 특징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범죄발생률이나 범죄의 종류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버제스는 구역을 중심지대(central business zone), 변이지대(transitional zone), 근로자 거주지대(working man's home zone), 주거지대(residential zone), 통근자 거주지대(commuter's zone) 등으로 나누고, 도시의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범인성 특징의 정도가 낮으며 그에 따라 범죄문제도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제2구역인 변이지대에 범죄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 구역이 전통적인 사회통제기능이 약화되어 사회규범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사에 따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구인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 그 유치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  
 ③ 구인한 대상자를 유치하기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유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하려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i)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ii) 2. 조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iii)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동법 제39조 제1항).  
 ②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동법 제45조).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벌금형을 제외한다)의 선고유예의 실효(失効)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2.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 3.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42조 제3항).

7. 부정기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소년교도소의 장은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상고심에서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그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④ 대법원 1998.2.27., 97도3421

8.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비행이나 일탈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
- ② 라이스(Reiss)와 나이(Nye)의 내적·외적 통제이론에 따르면, 애정·인정·안전감 및 새로운 경험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가 가족 내에서 충족될수록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아진다.
- ③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주변인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 ④ 사이크스(Sykes)와 مات차(Matza)의 중화(기술회)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비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도 중화기술의 하나에 해당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인간은 누구든지 범죄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는 요인으로 허쉬(Hirschi)가 지적한 것은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일상적인 유대이다. 유대의 요소 중 애착(attachment)은 애정과 관심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로, 부자지간의 정, 친구 사이의 우정, 가족끼리의 사랑,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 등 다른 사람과

맺는 감성과 관심을 의미하는데, 이 애착이 클수록 비행의 저지를 가능성이 적어진다. 즉 애착이 큰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주변인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① 에이커스(Akers)는 차별적 강화이론을 발전시켜 차별적 교제, 정의, 차별적 강화, 모방 등 네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이 학습된다는 사회학습이론을 주장하였다.

② 라이스(Reiss)는 개인의 통제력의 약화가 비행의 원인이라고 하는 개인통제이론을 주장하였으며, 나이(Nye)는 비행을 예방하는 통제의 유형으로 직접통제, 간접통제, 내부적 통제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들의 통제이론에 따르면, 애정·인정·안전감 또는 새로운 욕구 등이 충족될수록 통제력을 발휘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④ 사이크스(Sykes)와 마차(Matza)는 중화기술이론에서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상위가치에의 호소 등 다섯 가지의 중화기술을 주장하였다. 자신의 비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9.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주의: 소년보호조치를 취할 때 소년사건을 형사사건과 병합하여 1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② 인격주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의 행위에서 나타난 개성과 환경을 중시한다.

③ 과학주의: 소년범죄인의 처우를 법률가의 규범적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여러 전문가의 조언·협조를 받아 그 과학적 진단과 의견을 바탕으로 행한다.

④ 협력주의: 소년사법에서는 국가가 전담하는 사법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관계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의 상호부조와 연대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소년보호의 원칙 중 개별주의란 범죄인 처우의 개별화 이념에 따라 각각의 소년을 독립적으로 취급하고, 그 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0.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 이 처분과 장기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없다.

② 단기보호관찰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장기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제32조 제1항 제4호(단기보호관찰) 또는 제5호(장기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

① 장기보호관찰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2항 제5호).

② 단기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동법 제33조 제2항). 단기보호관찰은 기간의 연장규정이 없다.

③ 장기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3항).

\* 보호처분의 병합(소년법 제32조 제2항) :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보호자 등에 감호위탁)·제2호(수강명령)·제3호(사회봉사명령)·제4호(단기보호관찰) 처분

2. 제1항 제1호(보호자 등에 감호위탁)·제2호(수강명령)·제3호(사회봉사명령)·제5호(장기보호관찰) 처분

3. 제1항 제4호(단기보호관찰)·제6호(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위탁) 처분

4. 제1항 제5호(장기보호관찰)·제6호(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위탁) 처분

5. 제1항 제5호(장기보호관찰)·제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

11. 베카리아(Beccaria)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②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도 필요하다.

③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벌로 인한 고통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 인도주의의 실천을 위하여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사면제도가 활용되어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베카리아(Beccaria)는 범죄의 심각성과 형벌의 강도는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사형은 예방 목적의 필요한 한도를 넘는 불필요한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사면에 대해서는 형사제도의 무질서와 법에 대한 존중심의 훼손을 초래하므로 자비라는 얼굴을 한 가면이라고 혹평하고 사면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1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당해 보호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당해 보호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

을 취소하고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③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당해 보호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당해 보호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경찰서장의 송치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0조).

②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③ 동법 제39조

④ 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보호처분의 취소(소년법 제38조 제1항)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 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법원의 소년 피고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의 관할 소년부 송치)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13.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명해지는 보호관찰은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조치이다.

④ 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은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당해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당해 대상자의 연령·경력·심신상태·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므

로, 법원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대상자의 생활력,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화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반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되 일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점, 보호관찰명령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바른 생활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 조건의 부과이거나 악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부작위조건의 부과인 반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특정시간 동안의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데 특징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을 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0.11.5., 2017도18291).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②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한다(동법 제63조 제2항).

③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6.13., 97도703).

14.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터크(Turk)는 법제도 자체보다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② 셀린(Sellin)은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일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하고, 하나의 단일 문화가 각기 독특한 행위규범을 갖는 여러 개의 상이한 하위문화로 분화될 때 일어나는 갈등을 이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하였다.

③ 스피처(Spitzer)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활동에서 소외되는 인구가 양산됨에 따라 이로 인해 많은 일탈적 행위가 야기될 것이라고 보았다.

④ 봉거(Bonger)는 법규범과 문화적·사회적 규범의 일치도, 법 집행자와 저항자 간의 힘의 차이, 법규범 집행에 대한 갈등의 존재 여부가 범죄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법규범과 문화적·사회적 규범이 일치하는 정도, 법집행자와 피집행자의 힘이 차이, 법규범 집행에 대한 갈등의 존재여부 등에 의해 범죄화가 결정된다는 주장은 터크(A. Turk)의 범죄화론이다. 터크는 문화갈등이론과 낙인이론의 영향을 받아, 범죄성과 법질서에서 범죄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과정인 범죄화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권위, 즉 정치적 힘에 있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의 권위구조를 집단의 문화규범이나 행동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지배 집단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집단으로 구분하고,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범죄화의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 이론을 터크의 범죄화론 또는 권력갈등이론이라고 한다.

봉거(Bonger)는 1916년 저서 「범죄성과 경제적 조건」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이윤동기는 인간을 이기주의적으로 만들게 되고, 따라서 계급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범죄의 경제적 결정론을 제시한 사람이다.

15.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극적 일반예방 이론은 형벌이 사회의 규범의식을 강화해 주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범죄가 예방된다고 보는 것이다.
- ②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가 제시한 범죄예방 구조모델에 따르면, 사회환경 가운데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정화하는 것은 3차 예방에 해당한다.
- ③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모델은 사전적 범죄예방을 지향한다.
- ④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서는, 범죄예방에 관하여 범죄자의 범죄 성향이나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범행 기회를 축소하는 것이 강조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범죄예방모델 중 사회환경 가운데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정화하는 것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죄를 촉진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1차적 범죄예방에는 조명·시건장치·접근통제 등과 같은 환경설비, 감시·시민의 순찰 등과 같은 이웃감시, 경찰방범활동, 민간경비, 범죄예방 교육 등이 있다.

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를 감시·교육함으로써 반사회적 행위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을 말하고, 3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조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6. 벌금형에 관하여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 ② 10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 ③ 범죄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재산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
- ④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0만 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 정답 : ①

☞ 해설 :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누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59조 제1항). 따라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허용된다.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62조 제1항). 따라서 10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범죄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재산비례벌금제인 일수벌금제는 도입논의는 많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않았다.

④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행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므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행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2.22., 2006도8555). 이 판례에 따르면 벌금형의 경우에도 하나의 형에 대한 전부의 집행유예만 허용될 뿐,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0만 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17.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제도는 성범죄자의 교화·개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신상정보의 등록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동법 제47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동법 제49조 제2항).

① 동법 제45조의2

②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5.26., 2015헌바212).

④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12.5.24., 2012도2763).

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치료명령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④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며, 이 경우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② 동법 제15조 제3항
- ③ 동법 제14조 제3항
- ④ 동법 제14조 제4항 제1호, 제5항 제1호

\* 치료명령의 집행정지(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 1.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 2. 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3.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된 자에 대하여 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 집행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의 집행(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 1.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2.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3.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에 관한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강도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에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검사는 i)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ii)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iii)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① 동법 제5조 제1항 제4호

③ 동법 제5조 제2항

④ 동법 제5조 제4항 제2호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의 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

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 제1항 각 호의 조치(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잠정조치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포함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① 동법 제3조 제2호

②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③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긴급응급조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